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인권을 신장시킬 마음이 있는가?

- 교과부의 꼭두각시인 이대영 부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이것은 10만 서울시민의 요구로 주민발의 되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으로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학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폭력으로 신음해왔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과 입시위주의 교육, 저질의 급식과 강제 보충과 야간 자율학습 등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학생들은 살인적인 입시 경쟁에 시달려왔다. 이런 구조적 폭력 속에서 청소년들의 자살율은 세계1위를 달리고 있고, 최근에는 현장실습에서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 속에서 죽어간 학생들도 있다.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학생간 폭력의 문제 역시 이런 교육의 구조적 폭력이 교육의 공간에서 약자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학생들 안의 폭력으로 외화된 것이다. 연이은 학교 폭력의 문제는 인권을 간과한 교육이 어떤 괴물을 길러내고 있는가를 드러내지 않는가!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우리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적과 입시를 앞세워 침해되었던 학생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폭력과 차별이 없는 학교를 위하여 인간 존중의 경험 제공을 학교운영의 기본 목표로 삼겠다는 사회적 합의 선언이다. 실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나 광주에서는 지금 입시중심 면학분위기 조성의 생활지도에서, 개별 학생의 발달과 학생집단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생활교육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조례는 현장실습과정에서 학생들이 안전한 노동현장에서 교육적 실습을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적과 입시를 앞세워 침해되었던 학생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토대 위에서 폭력과 차별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지금처럼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처리하기에 바쁜 학교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차별과 폭력이 사라져야함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학교 당국과 교육 당국에 엄중하게 묻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교육의 전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기도 하다.

이대영 부교육감과 사실상 이번 재의 사태의 주범인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이같

은 학생인권조례의 의미를 이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겉으로는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든다고 하면서도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의 근간이 될 학생인권조례를 거부한 것은 교육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마저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상위법 위반이나 공익의 현저한 침해 우려가 있을 때만 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경기도와 광주에서 시행되고 있고, 학칙 제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지도 않으려니와, 지난 1월 3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역시 서울시의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뜻을 밝혀 학생인권조례가 공익적임을 전세계적으로 천명하였다.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학생인권보장의 의무를 가진 교육청과 교과부장관이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야 말로 상위법 위반이 아닌가. 미래형 교육과정, 일제고사 등으로 학교 현장을 파탄내는 ‘학교 폭력’을 저질러 온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학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매일 보도되는 이때에 무슨 낯으로 학생인권조례에까지 개입하는가?

이제 학생인권조례는 진보교육감 지역만의 산물이 아니며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염원이 되었다. 우리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야말로 경쟁의 이름으로 인간성을 말살해왔던 교육 현장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고, 학생과 교사가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만드는 가이드라인이라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새 학기에 폭력적인 학교 문화에 신음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과 평화가 숨쉬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오세훈 전 시장은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밥을 먹이자는 시민의 뜻을 보수와 진보의 정략적 대결로 몰고 갔다가 시민들의 뒷서리를 맞은 바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이대영 부교육감도 학생들의 인권을 학교에서부터 보장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정략적 소모전으로 만들고 있는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여 학생들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17일

경기도 인권교육연구회, 경북교육연대,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교육공동체 벗, 대구 학생인권연대, 전교조 전북지부,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학교인권을위한인 천시민사회연대,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